

군산공장 퇴직자 지원체계 구축

〈한국지엠〉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개소

심리안정·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재취업 위한 직업훈련도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퇴직자 및 구직자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지난 8일 열린 개소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김관영 국회의원,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구심적인 종합지원센터에 위기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종합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및 퇴직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따뜻한 배려가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2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담직원 30여명이 배치돼 심리안

정,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지원 등 군산시 내 퇴직자 및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심리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마음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위기가정을 위한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직의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면접지원, 면접의상 대여, 체험형 창업지원 등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추진할 예정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직업훈련교육은 기업체 구인수요를 파악해 취업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퇴직자 배우자를 위해 직업상담사, 보육교사 재교육 등 여성특화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이다.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에서는 건설·중장비, 전기 자격증 등 전문기술 교육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기업체의 구인수요를 고려한 위그선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도 개설한다.

이 외에도 창업기본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 삼천동 그린공원 '꽃동산' 조성... 4억여원 투입

공원 절개지의 토사 유실로 이용이 불편했던 전북 전주시 삼천동 그린공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안전한 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삼천동 그린공원에 총 4억6,000만원을 들여 도심 내 싱그럽고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린공원은 삼천택지개발지구 중앙부에 우뚝 솟아있는 근린공원으로 공원 내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기 시 공원 절개지 토사가 유실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중으로, 공사는 오는 7월에서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사면 절개지 구간에 식생토양 및 조경석을 이용해 사면보호공사를 시행하고, 공원 내부 녹지공간에 관목류 1만3,200주와 지피류 3만3,925본을 식재해 도심 내 특색 있는 미니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표소에 유권자들로 가득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몰려든 유권자들로 많은 기표소가 가득 차 있다. 한편, 9일 오후 3시 기준 전북지역의 투표율은 23.35%를 기록했다.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 ... 전북도, 폭염대응 TF팀 본격 가동

9월 30일까지,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 집중... 무더위쉼터 지정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 전망을 보면 6~8월에는 평년기온(21.9~25.9℃)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가동하는 등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폭염특보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등 실시간 폭염정보를 제공,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 지난 5월말까지 냉방기(에어컨)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농촌고령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10,025명을 활용하여 일일 건강체크·

안부전화 등을 지속 추진, 야외사업장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과 폭염특보 발령시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및 농촌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7년 폭염 발생시 피해가 컸던 닭·오리·돼지 등 가축폐사 방지를 위해 노후된 하우스식 축사에 환풍기·제빙기 설치를 지원, 축사내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폭염피해시 피해농가의 경제

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전까지 가족재해보험 가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작년에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1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올해에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늘막 설치, 살수차 임차 등을 통한 주요도로 물뿌리기, 공공장소 얼음비치,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 부근 나무를 식재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학생·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나서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상대적으로 포상 기회가 적었던 학생이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 찾아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

위원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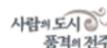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육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육고를 치르거나 독립운동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다는 공적이 있어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생 신분일 경우 수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당시

사회 특성상 활동의 제약으로 자료가 많지 않아 발굴이나 포상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개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